

식량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판단 필요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우유는 인간생존의 식량

인간은 태어나서 모유를 먹다가 얼마 지나면 유아용 우유를 먹게 된다.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유를 먹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우유가 기호식품이었지만 이제는 쌀 다음으로 유제품을 많이 먹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인당 쌀 소비는 71.2kg인데 비해 유제품은 70.7kg으로 거의 비슷한 양을 소비하고 있다. 향후 쌀소비는 줄고 치즈·발효유 등의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옛날에는 식량하면 밥이었는데 이제는 식당에서 육류를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을 것인지, 국수나 냉면을 먹을 것인지 묻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은 육류보다 유제품 소비가 더 많다. 전망도 그렇고 따라서 유제품은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 되었다.

유제품과 같은 필수 식품이 최근에 이상기후로 공급이 불안해져가고 있다.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 사료 값이 폭등하고 축산물 가격이 따라 오르게 되어 달리가 있어도 수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지난해 FMD 발생으로 삼겹살이 그런 예다. 치즈 수입도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의 도래에도 정부의 대응책이 신통치가 않다. 즉, 식량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차기정부는 식량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낙농정책에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향후 낙농정책은 식량에너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조정 이후 낙농산업에 관련된 낙농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낙농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어떤 나라와의 FTA에서도 지속가능하며 더 나아가 낙농강국으로서 수출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나라로의 유제품 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낙농산업관련자의 역할

낙농산업의 주역은 낙농가들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낙농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가공업체나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노력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나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농산업에 대한 우리의 비전제시가 먼저 필요하다.

우유생산은 낙농가가 하고 수집, 가공, 판매는 협동조합과 유업체가 담당하고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제도와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낙농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낙농정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산업관련자 모두가 공동이익을 위해서 한발자국 물러서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유제품시장은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어 현재의 낙농강국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싸워 이겨야 한다.

바람직한 낙농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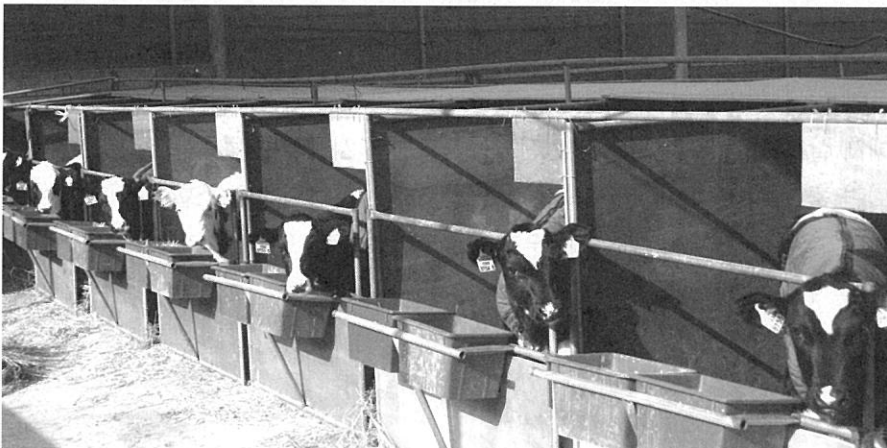
국제시장 전체에서 보면 우리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다. 낙농농가의 숫자, 유가공업체의 숫자, 우유생산 및 가공량 등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국제적 규모에서 보면 간단하다.

우선 낙농시장은 2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상호경쟁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하나는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다른 하나는 「유업체 중심의 계열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업체의 자율적 경영을 해

체시킬 수는 없다. 즉, 유업체의 우유수집, 가공·판매를 협동조합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은 낙농가 스스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하여 생산, 수집, 가공, 유통을 계열화 할 수 있다. 이것은 농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걸림돌을 제거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유 협동조합의 실태를 보면 서울우유조합, 부산우유조합, 충청도우유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서울우유조합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서울우유조합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현재는 조합원의 이익이 타조합이나 유업체 소속 낙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즉, 서울우유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낙농가들이 많다. 반면 서울우유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즉 서울우유조합 지역 외에 있는 낙농가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현재 서울우유조합원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고 통합으로 더 나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시 시유판매의 어려움, 조합경영의 악화를 우려해 부산우유조합과의 통합, 충청도우유조합과의 통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차기정부가 이것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위해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해볼만하다. 첫째, 기존조합원의 현재 편익을 보장해주고, 둘째, 신입조합원과의 차별화로 조합경영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국가지원이 따른다면 가능할 것이다. 즉, 현재우유 생산량의 20%는 국제 원유가로 사용·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폐기되었던 것이니 이를 부활시켜 수량만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낙농진흥회를 폐지하고 여기에 사용했던 재원을 가공원료유 지원에 사용하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도 않을 것이다.

서울우유조합에 통합되는 경우 다른 조합을 폐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의 조합은 생산에 전념하고 수집, 가공, 판매는 서울우유가 맡되, 서울우유의 신공장 건립에 다른 조합이 출자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우유조합의 간척지 육성우 목장, 분뇨처리에 정부가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새로운 정부는

- ① 낙농진흥법을 폐지하고,
- ② 서울우유조합 중심으로 현재의 낙농조합의 우유 수집·가공·판매를 통합하고 현재 총 생산량의 20%를 가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가격 차액을 보조 지원하며,
- ③ 간척지에 육성우목장지원, 대규모 조사료 생산지원(조사료 특구 지정) 분뇨처리를 사회간접자본차원에서 지원하고,
- ④ 서울우유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조합원의 실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조합원과 신입조합원을 구분하여 흡수토록 하고,
- ⑤ 유업체는 시장에서 우유협동조합과 경쟁하거나 유업체의 자력에 의해 우유조합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유업체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업체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살 길을 찾고 어려우면 선진낙농국가들의 사례들처럼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면 될 것이다. 유럽 선진 낙농국가들은 대개 하나의 낙농조합이 생산, 수집, 가공, 유통을 모두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